

월요광장

‘동사회강’의 저자 노촌 임상덕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읽고 또 읽어도 싫지 않고, 읽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글은 다산 정약용의 글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다산의 책을 읽으며 살아오고 있다. 그는 “종족(宗族)이 대대로 수십여 집이 함께 살면 한 고을에서 선망을 받는다. 그런데 그중에 학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제자 정수철에게 당부한 글)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이 가고 때 지어 살아가는 문중에 학자 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으니, 곰곰이 따져 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학자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문중이면서 잘난 채 얼굴을 내밀고 고개를 들어 마을을 누비고 다니니 부끄러운 일이요, 집안의 소년들이나 후생들이 본받을 사람이 없어 도의에 어긋난 말을 하고 어리

석고 망령된 짓만 하게 된다고 하였다. 옳은 말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모두의 존경을 받을 학자가 나오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또 희망하였다. 모범을 보여 줄 집안의 학자 어른이 없고서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으로 추락될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호남에는 명문 집안이 많았으니 그 집안마다 대표적인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명문거족으로 축망을 받기 이르렀다. 나주의 회진에 기반을 둔 나주 임씨 또한 대표적인 명문이다. 사는 지역이 회진(會津)이라는 명칭이어서 세 상에서는 ‘회진 임씨’라고 호칭하는데 인물과 학자를 많이 배출한 집안이었다. 문 학자로는 백호 임제, 높은 벼슬로는 이조 판서를 지낸 충익공 임담, 학자로는 창계 임영, 노촌(老村) 임상덕(林家德·1683~1719)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다만 임상덕은 회진 임씨였으나 이웃 고을인 무안의 이산리(梨山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무안의 인물이자 학자로 여기고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나는 1985년 우리 고향 출신 임상덕의 문집인 ‘노촌집’(老村集)을 해제하여 영인본으로 간행하는 일을 도운 적이 있다. 노촌집을 해제하면서 본격적으로 관

료이자 역사학자였던 노촌의 학문과 사상, 천재적 소양을 바탕으로 저작된 탁월한 역사책 ‘동사회강’(東史會綱)이라는 대저를 남겼음까지 알게 되었다. 10권 5책으로 된 노촌집은 노촌의 학문적 깊이와 사상의 탁월함을 알려주는 데 부족한 이 없는 책이었다. 당시 실학사상이 역사의 표현에 등장하지 않은 때였지만 노촌의 생각은 벌써 실학적인 사고가 많아 실학사상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상가로 나는 그 책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2017년 10월 30일 목포대학교에서는 노촌의 학문과 사상 및 ‘동사회강’에 대한 토론회를 벌이는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나는 그때에도 ‘기조발제’를 맡아 노촌 같은 큰 학자, 역사가가 세상에 널리 현양되지 못했음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도 호남의 옛날 학자로서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과 사상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었던 것 또한 경하할 일이었다.

‘동사회강’은 27권 10책의 방대한 역사책이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대단한 책이다. 우리는 역사책이라면 안정북(1712~1791)의 ‘동사강목’만 알고 있는데, 노촌이 30세에 저술한 ‘동사회강’은 안정북이 태어났던 1712년의 작품이다. ‘동사강

목’은 전적으로 ‘동사회강’의 영향을 받아 저술되었으니 노촌의 업적이 얼마나 선구적인 일인가. 50년 전에 ‘동사회강’이 저작되어 조선 역사학의 선구적인 구실을 했던 점만으로도 노촌은 크게 찬양을 받아야 할 학자이자 역사가였다.

노촌은 분명 천재였다. 그것도 매우 부지런하고 빈틈없이 학문에 온 정력을 바친 천재였다. 17세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23세에 문과에 장원급제, 그 뒤 호당(湖堂)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었고, 또 호당 응제에서도 수석을 차지했다. 겨우 벼슬을 시작한 지 14년이 되던 해 37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요절한 천재. 그만한 학자가 명이 길어 더 오래 생존했다면 얼마나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인가. 안타까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데, 직계 후손들이 번창하지 못했음 또한 애석한 일이었다.

다행한 일은 그의 저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동사회강’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자주 학술대회도 열리고, 현양 사업도 펼쳐져 천재 학자의 업적이 세상에 더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간 한 학자가 배출되어 집안을 빛나게 해 주었으니 문중에서도 마음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꿈꾸는 2040

재정 분권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조건



이진술
위헌연구원 이사·전남대 정외과 4학년

2019년 광주시 예산은 5조 890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 재정 자립도가 36.9% 임을 감안했을 때 자립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약 2조 170억 원이다.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중앙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지방 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 자치 단체는 독립적인 권한과 재정 확보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자치단체는 적절한 세입을 확충했으나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가 대다수였다. 문제가 고착되자 문재인 정부는 ‘자치 분권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 자치 분권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권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세입 비율은 약 8대 2로 중앙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의 재정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 미국의 수준과 유사한 비율이다.

대한민국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은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세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즉 ‘지방 재정 조정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 정부 부처와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유착 가능성을 높이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수혜와 포섭 혹은 배제의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재정 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6대 4 수준의 세계 개편과 세급의 특성에 따른 재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세는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낮은 소득세, 법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지방세는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정반대의 배치로 지방의 세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단

계에 앞서 세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재정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남용되는 재원이 증가할 확률이 매우 크다. 때문에 재원 운용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지방 의회, 지역 언론과 시민 단체의 역할 강화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의회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가 의회에 진출했을 때 곧바로 예산 심의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선 의원이 의회에 진출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당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 ‘거름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예산 심의 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심의는 사도의 지방 자치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회계 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경우 35일 동안 5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체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

문에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예결특위를 상설화 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예산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소속 전문위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 위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심의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이전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결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산의 정보는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미래지향적 건전 예산 운용 원칙에 따라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방 의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 자치 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은 결국 지방 의회이다. 지금부터라도 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지방 의회는 재정 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할 기본 토대이다.

기고

일본의 경제 회복, 대한민국 새 도약의 계기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구한말의 시대상과 동학 농민 혁명의 과정을 큰 줄기로 엮어 낸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선사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의 열연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과거가면서 현재와 맞닿아 있는 가슴 아픈 우리 역사를 잘 표현해 전 국민의 심금을 잔잔하게 울렸다.

특히 ‘우금치 전투’ 장면에서 당시 조선 침략이라는 일본의 야욕에 맞서 싸웠던 농민군의 모습은, 과거를 부정하면서 경제적 회복을 자행하는 일본에 대응하여 ‘NO JAPAN, BOYCOTT JAPAN’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재 우리 국민의 모습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에 항의해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과 유학생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문화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아베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경제와 무역의 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자유 무역주의의 원칙을 왜곡하여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단결된 힘으로 ‘국내 제품 이용, 역사 바로 알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기업은 ‘원천 기술 개발,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

탈피’ 등 국가와 국민, 기업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이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경제재복 보복 조치를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일본 경제의 그늘에 안주하던 경제적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100여 년 전, 일제의 경제 침탈로 민족 경제가 침몰 직전에 이르자 국산품 애용, 민족 기업 육성 등의 구호로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개했던 ‘조선 물산장려 운동’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민족적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배제 철폐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전범 기업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겁박하는 국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외교이며, 자국의 도시 오사카에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과 세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무역 및 지정학

적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G20 결의’를 한 달여 만에 뒤엎어 버리는 국제적인 자해 행위라고 규탄 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세계 곳곳에 일제 침략기 시절의 만행과 경제 회복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결집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3·1 독립 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얼마 있으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다.

일제 치하 암흑기에서 우리 선조들이 보여 주었던 끊임없는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겨 내야 할 것이다. 경제 전쟁에서 이겨 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조들에게 보답하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베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보복적 수출 규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향해 협력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社說

한고비 넘어 한전공대 개교 차질 없도록

한국전력 이사회가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600억 원을 우선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 대학 설립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과 캠퍼스 건축 계획 등 후속 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으면서 한전공대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됐다.

한전은 엇그제 제9차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과 초기 운영, 캠퍼스 설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600억 원을 1차 출연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후 추가 자금은 사업 및 재정 분담 규모를 구체화해 단계별로 출연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 이사회는 한전공대 설립의 한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의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야당과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면서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대학 설립에는 6210억 원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는 64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는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 총 1300명에 교수 100명, 일반 직원 100명 등으로 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안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한전은 이후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대학 설립과 개교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전이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한전의 부담과 중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전공대는 지역 균형과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1670억 원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고 연간 운영비로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히 이사회 의결이 이뤄진 만큼 이제 대학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내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야 할 것이다.

‘마시기만 하면 살 빠진다’ 허위광고 주의를

마시면 살 빠지는 커피, 바르면 가슴 커지는 화장품? 다 거짓이다. 여름철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하며 온라인과 SNS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아온 식품·화장품 제조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을 점검, 허위·과대 광고 725건을 적발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살 빼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천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A사의 경우 자사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에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B사의 제품인 ‘OO방탄커피’는 커피에 무염 버터 등을 섞어서 제조한 버터커피의 일종인데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хла려 증가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용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의 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이트 1천 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으며 특히 일부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보르피린’이 가슴 확대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온갖 사탕발림으로 유혹하는 이들 제품이 실제로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당국은 이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타인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남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비공격적으로, 그리고 잠정보다는 단점 위주로 이뤄지게 마련이어서 점수도 박한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데다, 평가라는 작업 자체가 ‘값의 위치’를 내려다보며 관찰하는 ‘일방 통행식 작업’이기 때문이

다. 특히 평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생

투사(投射)

각되는 경우, ‘공정하고

명분’이라는 명분

에 기대어 더욱 박한 점수가 매겨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걸출한 위인이거나 지도자들도 박한 평가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철의 여인’(Iron Lady)으로 알려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지난 197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외교관들로부터 ‘다소 순진하고’ 심지어 ‘너무 소년답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우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지식이 짧다’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였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도 각각 ‘이기적이다’ 혹은 ‘돼지 눈’이라는 악평을 받았다.

미국 외교관들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에 대해 ‘무책임하고 허영심이 많으며 효율성은 낮다’고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대해선 ‘비판에 민감한 독재자 스타일, 별거벗은 황제’라는 악평을 내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해선 ‘위험을 회피하며 창의력이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요즘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치열한 싸움판이

벌어진 우리 정치권에서도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범람하고 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나의 생각, 감정, 소망 등을 자신으로부터 떼어 내 상대에게 씌우는’

투사(投射, Projection)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남에게 내리려고 하는 평가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기본이다. 남을 평가하려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평가해 볼 일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